

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기획재정부, 2022. 7

-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「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」 책자*를 발간하였다.

* '97년도부터 매년 2회(1월, 7월)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·제도 등을 정리·발간하여 지자체, 공공기관, 도서관 등에 비치

-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(부·처·청·위원회)에서 취합한 157건의 정책이 분야·시기·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.
- 저성장·양극화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,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한 행정 인프라 구축, 제도 개편 내용 등도 담고 있다.

-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<세제·금융>

-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(탄력세율 기준 37%)로 인하('22.7.1.~'22.12.31.)

* 유류세 30% 대비 추가 인하폭(부가가치세 포함, 원/ℓ) :

(휘발유) △57(247→304), (경유) △38(174→212), (LPG) △12(61→73)

-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* 시행('22.10.1.)

* 최대 30조원 규모로 '소상공인·자영업자 새출발기금(가칭)'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

-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현행 60~70% 수준*인 LTV 상한을 주택소재지역·주택가격·소득과 상관없이 80%로 완화('22.3분기 중)

* (투기·투기과열지구) 60%, (조정대상지역) 70%

<교육·보육·가족>

-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확대와 윤리적 이슈에 대비하여 「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」



마련('22 하반기)

- '09년 2학기~'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*('22.7.6.~'24.12.)

* (현재) 평균 4.9% (5.8%~3.9%) → (변경) 2.9%

- 청소년부모 가구*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지원('22.7월~12월)

*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가구

<보건·복지·고용>

-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*하는 한편,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('22.10.1.~)

* (일반 1·2·3형)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: 1천만원 → 5천만원

(일반 2·3형) 휴업급여금 (4일 이상 입원시, 120일 한도) : 2~3만원/일 → 6만원
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·실직·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%(월 최대 45천원, 최대 12개월) 지원('22.7월~)

- 일정규모 이상*의 사업장(건설현장 포함)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·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**('22.8.18.~)

* (규모)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 예정

** (과태료) 1,000(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시), 1,500만원(휴게시설 미설치시) 이하

<문화·체육·관광>

-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「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」 수립 및 시행('22.7.19.~)

<환경·기상>

- 국가 주요 계획·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「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」 시행('22.9.25.~)

* 에너지 개발,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, 도시개발, 수자원, 산지, 항만, 하천 등 대상

- 환경표지 인증 관련,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* 확대 및 생활밀착형 제품군**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신설('22.7월~)

* 노트북, 모니터, 주방용·세탁용 세제, 샴푸·린스 및 바디워시, 의류 제품군 등

** 텀블러, 다화용기 대여 서비스 등

-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,500여개 읍·면·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*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('22.12월~)

* (제공요소) 기후요소 4종(평균/최고/최저기온, 강수량), 극한기후지수 27종(폭염, 여름일

수 등),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종(냉난방도일, 건조지수 등)

<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>

-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* 시행('22.8.4.~)
 - * (투자) 인허가·인프라 등 패키지, (인력) 계약학과·특성화대학 등, (기술) 특화R&D+특례 지원
-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(10억원) 신설('22.7월)

<농림·수산·식품>

-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·변경·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('22.8.18.~)
-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*하도록 의무화('22.8.4.~)
 - *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

<국방·병무>

-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(11,000 → 13,000원, '22.7월~)
-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확대 운영
 - * (기존) 서울·대구·광주·대전에서 센터 운영 → ('22.7) 부산·춘천에도 센터 신설

<행정·안전·질서>

-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,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*을 확인할 수 있는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' 시행('22.7.12.~)
 - *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사진, 발급일자,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
-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·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,
 - 법령 제·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 청원 도입('22.12.23.~)
-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과('22.7.12.~)

□ 이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, 공공 도서관, 점자 도서관 등에 12,000여권이 배포·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.



- 6월 30일(목) 10: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정책>정책자료>발간물)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,
- 7월 초 '이렇게 달라집니다' 반응형 웹페이지*
(<http://whatsnew.moef.go.kr>)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.
* 스마트폰, 태블릿,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되어 보이는 웹페이지
- 특히,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, 트위터,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,
-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.

- 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(책자 일부 발췌)

〈기획재정부〉

■ 유류세 인하폭 37%로 확대

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, 경유,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%에서 7%p 증가한 37%로 확대됩니다.

(‘22.7.1. 개정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, 「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」 시행)

■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·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하였습니다.

■ 이에 따라, 기존 유류세 30% 인하와 대비하여, 휘발유는 57원/ℓ, 경유는 38원/ℓ, LPG부탄은 12원/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(부가가치세 포함).

- 추진배경 :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·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,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(탄력세율 기준 37%)까지 확대
- 주요내용 :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%에서 37%로 확대
- 시행일 : 2022년 7월 1일

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

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%p 상향됩니다.

■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%까지 매입세액을 인정받고 있으나, 10%p 상향 시 75%까지 매입세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식품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재료비 부담 경감
- 주요내용
 -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%p 상향 조정

구분	과세표준	기본	우대 공제한도(~'23.12.31)	
			음식점업	그 외
개인사업자	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50%	65% → 75%	55% → 65%
	2~4억원		60% → 70%	
	4억원 초과	40%	50% → 60%	45% → 55%
법인사업자		30%	40% → 50%	

- 시행일 : 2022년 7월 1일

■ 단순가공식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

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, 간장,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'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.

■ '22년 7월부터 '23년말까지 플라스틱,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, 간장, 단무지,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■ 또한, '23년말까지 커피·코코아원두(단, 볶은 것 제외)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.

- 추진배경 : 생활·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원가 및 식재료비 경감 추진
- 주요내용
 - (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) 병·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품* 부가가치세를 '23년까지 면제
 - *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매주간장된장고추장
 - (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)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·코코아두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'23년까지 면제



●시행일

- (단순가공식료품 면제 확대) :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
- (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) : 2022년 6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

■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

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.

■ 이에 따라,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% 인하(5→ 3.5%)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유도
- 주요내용
 -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('22.6.30. → 12.31.)
 - '22.12.31.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율 30% 인하(5→ 3.5%)
- 시행일 2022년

■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

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'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(총수입금액, 면세공급가액 포함)이 2억원 이상인 자'로 확대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(총수입금액, 면세공급가액 포함)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(2020년 12월 23일 발표)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세원투명성 제고
- 주요내용
 -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를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

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(총수입금액)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2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

*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(총수입금액)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

- 시행일 : 2022년 7월 1일

■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

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(총수입금액, 면세공급가액 포함)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.

■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,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주요내용

-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·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- (공제대상) 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 ·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(총수입금액)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- (공제금액) 발급건수 당 200원
- (공제한도) 연간 100만원
- (적용기한) 2022년 7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

*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(세금)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

- 시행일 : 2022년 7월 1일

〈관세청〉

■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

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 방문 없이 국산품을 시내보세판매장(면세점)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, 보세판매장의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국산품 판매를 촉진하고자 합니다.



- 코로나19가 정상화되면 관광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*하여 방한 외국인에 한해 귀국 후 일정기간 내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.

* (성과 평가) 6개월 마다 운영상황을 분석

-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 지침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보세판매장 업계는 플랫폼 개발, 판매국가물품 선정, 해외배송 계약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후 업체별로 7월 이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

- 추진배경 : 보세판매장(면세점)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'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
- 주요내용 :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(해외 배송) 허용
- 시행일 : 2022년 3월 23일
(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)

■ 해외직구 물품 '구매대행업자 등록제' 본격 시행

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.

-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'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'를 기입해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-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.

※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

- 추진배경 :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및 통관적 법성 확립
- 주요내용
 - (신청방법)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통관지 세관에 신청서와 첨부서류* 제출
*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, 국세납세증명서,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
 - (제출방법) 방문, 우편, 전자메일, 팩스
 - (등록 유효기간) 3년
 - (미등록 시)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시행일 : 2022년 7월 1일

〈금융위원회〉

■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

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.

※ 최대 30조원 규모로 '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(가칭)'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

■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,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(90일 이상 장기연체)했거나,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,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, 장기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, 금리도 감면합니다.

-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~90%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.

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)

- 추진배경 :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
- 주요내용 :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, 법인,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, 금리감면, 원금감면 지원
- 시행일 : 2022년 10월 1일

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

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(LTV) 상한이 완화됩니다.

■ 현행 60~70% 수준*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%로 완화됩니다.

* (투기투기과열지구) 60% (조정대상지역) 70%

- 추진배경 : 단기간 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하여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
- 주요내용 :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완화를 우선 추진
- 시행일 : 2022년 3분기 중



■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

2022년 3분기 중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(DSR)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■ 보다 실질적인 소득흐름을 반영*하도록 미래소득 계산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

- * (現)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 → (改) ① 대출시~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, ②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
- 추진배경 :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LTV 완화와 연계하여, 청년층 대출이 과도히 제약되지 않도록 DSR 산정방식 합리화
- 주요내용 :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(구체적 방안 등 추후 발표 예정)
- 시행일 : 2022년 3분기 중

■ 차주별 DSR 3단계 시행

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.

■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(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)이 40%(은행)50%(비은행)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* 전세대출, 중도금대출,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
- 추진배경 : 상환능력 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유도하여 과도한 대출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고,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
- 주요내용 :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
- 시행일 : 2022년 7월 1일

■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

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.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.

■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.

■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·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기업당 1억원(잠정)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, 보증료 차감·심사요건 완화 등

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

- 추진배경 :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
- 주요내용
 -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 3.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
 - － (자금용도)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 - － (지원한도) 기업당 1억원(잠정) / (보증방식) 직접보증
 - － (우대사항) 보증료 차감, 심사요건 완화 등
- 시행일 : 2022년 하반기 시행

■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

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.

▣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, 신용점수 하위 10%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▣ 이번 특례보증은 '22.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,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.

- 지원대상 : 신용점수 하위 10% 이하이면서 연소득 4,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
- 대출심사 :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
- 자금용도 :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
- 대출한도 : 최대 1천만원
- 상환방식 :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(거치기간 최대 1년, 중도상환수수료 없음)
- 대출금리 : 연 15.9%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* 예정
 - * 매년 3.0%p 인하(대출기간 3년) / 매년 1.5%p 인하(대출기간 5년)
- 시행일 : 2022년 10월 중

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마련

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및 감사인 지정제외 점



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합니다.

■ 특히,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미비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2022년 5월 3일 이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회계법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마련하여 품질관리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
- 주요내용
 -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통합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 요건(등록요건)을 충족하고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함
 -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및 지정제외점수를 부과하고,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
 - 특히,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미비한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외점수가 대폭 부과될 예정
- 시행일 : 2022년 5월 3일

■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, 지급보증에 대한 총당금 적립 강화

상호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사,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,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
■ 다만,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 미사용액에 대한 신용환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*할 계획입니다.

* (상호저축은행, 여신전문금융사) '22년 20% → '23년 40%
(상호금융) '22년 20% → '23년 30% → '24년 40%

■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제2금융권의 총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고, 금융업권간 총당금 적립에 대한 일관성을 제고
- 주요내용 : 제2금융권(상호저축은행, 여신금융전문업, 상호금융)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,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를 마련

구 분			한도성 여신 미사용액		지급보증	
			현 행	개 선	현 행	개 선
상호저축은행			대손충당금 X	대손충당금 ○	대손충당금 ○	(좌 동)
여신전문 금융	신용카드	신용판매, 카드대출	대손충당금 ○	(좌 동)	부동산PF 채무보증만 대손충당금 적립	모든 지급보증에 대손충당금 적립
		기타 한도성 여신	대손충당금 X	대손충당금 ○		
	비카드	한도성 여신				
상호금융					해당없음	

- 시행일 : 2022년 7월 1일

■ 오픈뱅킹 이용편의 제고

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고객 편의성이 제고됩니다.

-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간편송금, 간편결제 시 사전에 출금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금 한도조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(API)를 신설합니다.

※ 이용고객이 오픈뱅킹을 통해 출금할 수 있는 일간 최대한도는 1천만원(한도 도달 고객의 해당일 추가 출금이체 이용은 자동 중지 처리)

- 신설되는 기능은 오픈뱅킹 참여기관, 유관기관 협의 및 전산 개발을 거쳐 2022년 10월 중 제공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오픈뱅킹 이용자 편익 증진 및 한도 초과에 따른 출금실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일간 출금이체 한도 조회 기능 제공
- 주요내용 :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출금 전 일간 출금 한도 초과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잔여 출금한도 조회 API를 신설
- 시행일 : 2022년 10월 중

■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

금융권이 외부 서버나 플랫폼 등 IT 자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,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합니다.

('22.10월 중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(금융보안원) 개정 예정)



- 불명확한 업무 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, 업무 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.
- 중복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(CSP) 항목을 정비*하여 평가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*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,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을 차등 적용 등
-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사업 추진의 적시성이 높아집니다.
- 추진배경 :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, 지나치게 엄격한 현행 클라우드 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혁신을 지원할 필요
- 주요내용
 - 불명확한 업무중요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, 업무중요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
 - 중복·유사한 클라우드사업자 안전성 평가(CSP) 항목을 정비*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
*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고, 비중요 업무의 경우 평가항목 차등 적용
 -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
- 시행일 : 가이드라인 개정 : 2022년 10월 / 제도 시행 : 2023년 1월 1일

■ 데이터(가명정보) 결합 절차 개선

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- 또한, 데이터전문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일정 요건*하에 타 기관의 데이터와 스스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
*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평가 등
- 개정내용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22년 7월 중 개정 완료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
- 추진배경 :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
- 주요내용
 - 정보집합물을 이용하기만 하는 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집합물 이용기관이 결합신청 및 결합절차에 참여 허용

-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일부만 추출하여 활용하려는 경우,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집합물을 결합할 수 있는 절차 도입
- 데이터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스스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 확대
- 시행일 : 미정(7월 중 개정 완료 추진)

〈고용노동부〉

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

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

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(건설현장 포함)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)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, 위치, 온도,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: 1,500만원 이하 과태료,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시 : 1,000만원 이하 과태료

- 추진배경 :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(과태료 부과) 도입
- 주요내용
 -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,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(건설현장 포함)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·관리기준 준수 의무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
 -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
- 시행일 : 2022년 8월 18일

■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도입

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(DCIRP)에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 제도)가 도입됩니다.

■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.



-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,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(펀드)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.
-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(퇴직연금규약 반영) 도입하고,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.
-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추진배경 :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,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·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%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
- 주요내용 : 근로자(가입자)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으로 적용 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
- 시행일 : 2022년 7월 12일

■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

2022년 7월부터는

- ① 유통배송기사(물류센터에서 점포·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·점포에서 소비자 배송),
- ② 택배 자·간선기사(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),
- ③ 카캐리어·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(전용차량으로 자동차·곡물 등 운반)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.

-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, 현재 총 15개 직종*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*골프장장캐디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, 대출모집인 등(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)

-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, 산재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-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,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(2022.6.10.) 이후부터 보조사업

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
- 주요내용
 - 유통배송기사, 택배 지·간선기사,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 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(시행 : 2022년 7월 1일)
 -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(2022.6.10.)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
- 시행일 : 적용직종 확대(2022년 7월 1일)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(2022년 6월 10일)

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

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,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.

■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
- 주요내용
 - (근로자위원 선출방법)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,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
 - (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)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
 - (위원선거인 선출)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
- 시행일 : 2022년 12월 11일

■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실시

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기업의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.

■ 플랫폼기업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(50%, 연간 최대 3억원)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- 주요내용
 - (지원대상) 플랫폼기업 및 컨소시엄
 - (지원수준) 서버 등 소요 비용(임차료, 운영비, 인건비 등)의 최대 50%(연간 3억원 한도)
 - (지원요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수행 능력, 사업내용의 적정성, 사업의 효과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 판단
- 시행일 : 2022년 6월

■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

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*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(시공사)에서 발주자**로 변경됩니다. ('21.8.17. 개정, '22.8.18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)

* 예외 : 공사기간 1개월 미만, 육지와 미연결 섬(제주는 제외)

**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·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

■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,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※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

■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(K2B)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,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.

■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

- 추진배경 :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, 형식적인 기술지도 우려
- 주요내용 :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
- 시행일 : 2022년 8월 18일

〈과학기술정보통신부〉

■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

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정하여,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.

■ 다만, 국가 등이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, 공사 발주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.

■ 이를 통해,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성장 기반 조성과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● 추진배경 :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(시행 '22.7.) 제24조의2제5항 신설 및 최근 정보통신 산업 발전과 환경변화로 인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활동 영역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까지 진입하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임

● 주요내용

- (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) 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자로 설정
- (도급가능한 공사금액 하한 신설)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하고,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

● 시행일 : 2022년 7월 12일

■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

기업부설연구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기업 또는 연구소 운영 중에 연구개발인력 관련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인력의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■ 기존에는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기업이 제출하였으나,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대보험 관리기관으로부터 가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■ 가입정보 제공 관련 법령 개정(2022년 6월 29일 시행)을 바탕으로 기관 간 자료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및 관련 서식 개정을 거쳐 2022년 8월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



- 추진배경 : 부실 기업부설연구소를 방지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
- 주요내용
 -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(법률)
 - 과기정통부가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(대통령령)
 -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려는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에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삭제(시행규칙)
- 시행일 : 2022년 6월 29일(법률, 시행령), 2022년 8월 (시행규칙)

■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우주산업이 혁신적인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여,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먼저,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육성하기 위해,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,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이 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, 우주개발 사업에 기업들이 이윤 등을 계상할 수 있도록 계약방식을 도입하고, 계약 이행 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우주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, 신기술 적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,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.

- 추진배경 :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
 - ② 계약방식 도입
 - ③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
 - ④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

- 시행일 : 2022년 12월 (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)

〈산업통상자원부〉

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

2022년 8월 4일부터 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이 시행됩니다.

■ 「국가첨단전략산업법」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적인 기술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.

■ 투자인력양성기술혁신*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인력 보호기반**을 강화할 것입니다.

* (투자)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, (인력) 계약학과특성화대학 등, (기술) 특허R&D+특례

**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&A 승인 의무화, 전문인력 지정제도 등 신설

- 추진배경 : 美中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급박하게 전개 중인 주요국 “핵심산업 공급망 전쟁”에 신속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실현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 시급

• 주요내용

-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신설
-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 뒷받침
-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 지원
-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 강화

- 시행일 : 2022년 8월 4일

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

2022년 7월 5일부터 산업데이터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시행됩니다. ('22.1.4. 제정 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시행)

■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.

* 지능정보화기본법, 공공데이터법 등 기존 법령은 추상적포괄적 법률이거나 특정 분야지원 대상을 한정하고



있어 규정상 공백이 존재

■ 또한,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산업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.

* 산업가치사슬 전반의 혁신, 산업 데이터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 등을 망라하는 산업 맞춤형 법률정책 필요

- 추진배경 : 산업데이터I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규범, ②지원 제도, ③추진체계 등 규정
- 주요내용
 -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 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
 - 선도사업 발굴지원, 계약 가이드라인, 표준화, 플랫폼,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
- 시행일 : 2022년 7월 5일

〈중소벤처기업부〉

■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강화 등 실시

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이 「소상공인법」 제12조의2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, 상향된 보정률(90%→100%) 및 하한액(50만원→100만원)을 적용받게 됩니다.

■ 아울러, 손실보상 대상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됩니다.

■ 개정내용은 '22년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온전한 손실보상 등 긴급구조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
- 주요내용
 - (개요)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로 '21.7.7.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(소상공인법 제12조의2)
 - (대상) ①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*를 이행하여 ② '19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③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(연매출액 30억원 이하)

- * ('21.3분기)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, ('21.4분기 추가) 시설 인원제한 조치
- (기준) 개별업체 손실(영업이익 감소)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
 - (산식)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

월별 일평균 손실액		
'19년 대비 '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('19년 영업이익률 + '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) 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 x × 보정률	×	월별방역조치이행일수
		×
		보정률

〈조달청〉

■ 벤처나라 '예비지정' 사업 시범 운영

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상품을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등록하도록 하여,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.

- 현재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들의 기술품질평가에서 70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나, 청년기업(만 39세 이하)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(3년 이내)은 최소한의 자격요건*을 갖춘 경우,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.

* 법적의무인증 보유 여부,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제조 여부 등

-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, '예비지정'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

- 벤처나라 '예비지정' 사업은 2022년 7월부터 개시합니다.

- 추진배경 : 전문가들의 기술품질심사 없이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,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의 판로를 신속하게 지원
- 주요내용
 - 청년기업(만 39세 이하)과 제조능력을 갖춘 초기 창업벤처기업(3년 이내)은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, 심사없이 신속하게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여 홍보판매
 - 해당 상품은 6개월간 벤처나라에서 시범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, '예비지정' 이후 벤처나라 상품으로 정식 지정될 경우 최대 5년 간 벤처나라에서 상품 판매 가능
- 시행일 : 2022년 7월



■ 「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」 개정

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,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합니다.

-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타사제품 납품 등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 있는 건전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7년 이래로 도입 및 시행되어 왔습니다.
- 금번 개정내용으로는 ①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, ② 소프트웨어의 직접생산기준 완화, ③시정조치 요구 대상 확대, ④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이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, 영세 중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이 한층 용이해지고, 제조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점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개정내용은 2022년 9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.

- 추진배경 :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필요
- 주요내용
 -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(현행)중소기업에서 (개정)중견기업까지 확대
 -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 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
 -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
 -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
- 시행일 : 2022년 9월 1일

■ AI기반 발주지원, 'e-제안요청 도움' 시스템 오픈

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SW사업 제안요청 발주지원을 위하여 AI기반 발주지원('e-제안요청 도움')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.

- 「e-제안요청 도움」은 발주기관에 SW사업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및 자가진단, 지능형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.
- 발주기관은 SW사업의 규모와 유형에 적합한 참가자격과 평가항목 등 제안요청서 표준서식을 받아볼 수 있으며,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, 작성된 제안요청서 법령준수 및 요구

사항 오류 등 조달요청 자가진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■ 발주기관에 AI기반 제안요청서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정보화사업 발주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,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■ 'e-제안요청 도움'은 2022년 8월부터 서비스 개시합니다.

- 추진배경 : SW사업 제안요청서를 쉽고, 빠르게, 정확히 작성검토를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 AI 기반 발주지원 시스템('e-제안요청 도움')을 구축운영하여 ICT발주체계 선진화
- 주요내용
 -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'참가자격', '평가항목' 등 공통사항을 Rule기반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도구 제공
 - 조달발주 지식베이스 및 유형별 제안요청서 비교진단 모델을 구축하여 AI기반 학습데이터를 통해 제안요청서 자가진단기능 제공
 -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유형별 제안요청서 지능형 검색서비스 제공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·재정환율

통 화 명	7월 1일(금)	7월 4일(월)	7월 5일(화)	7월 6일(수)	7월 7일(목)
미 달 러 (USD)	1299.80	1294.20	1297.90	1298.00	1307.40
일 본 엔 (JPY)	957.18	957.14	955.43	957.05	960.93
영 국 파 운 드 (GBP)	1581.14	1566.95	1572.41	1551.95	1558.81
캐 나 다 달 러 (CAD)	1009.51	1004.81	1009.96	996.28	1003.15
홍 공 달 러 (HKD)	165.64	164.93	165.42	165.42	166.61
위 안 화 (CNH)	193.89	193.06	193.79	194.16	194.76
유 로 화 (EUR)	1361.87	1350.37	1354.10	1332.72	1331.33
호 주 달 러 (AUD)	896.86	883.10	892.63	882.25	887.07
싱 가 폴 달 러 (SGD)	935.01	927.28	929.99	923.71	930.73
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294.91	293.67	294.11	293.70	295.49